



주간 통일정세

2013-01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위성발사로 민족 자부심 복돋웠다"(12/3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공위성 발사 성공을 축하하는 노동당의 연회에 참석해 위성발사에 기여한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치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전함.
 - 통신은 이날 "당 중앙위가 30일 목란관에서 첫 실용위성인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 발사에 공헌한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꾼들을 축하하는 성대한 연회를 또다시 마련했다"며 김정은 제1위원장이 연회에 참석했다고 보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연회에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를 성과적으로 발사함으로써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을 온 누리에 빛내고 노동당의 절대적인 권위를 결사적으로 옹호 보장했으며 천만 군민(軍民)에게 큰 민족적 자부심과 필승의 신념을 복돋워주고 공화국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을 전례없이 높였다"고 치하함.
 - 김기남 노동당 비서는 연회에서 한 연설을 통해 "김정일 애국주의의 결정체인 광명성-3호 2호기의 발사 과정을 통해 장군님(김정일)의 유훈을 어떻게 결사관철해야 하며 김정은 원수님의 영도를 어떻게 충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온 나라 인민 앞에 실천적 모범으로 보여줬다"고 강조함.
 - 이날 연회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현영철 군 총참모장, 김격식 인민무력부장, 김경희·최태복·박도춘 당비서, 강석주 내각 부총리,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등 북한 지도부가 총출동함.

- **北 김정은 육성 신년사…남북공동선언 이행 강조(종합)(1/1, 조선중앙TV)**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1일 남북간 대결 상태 해소와 이를 위한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강조했다며 조선중앙TV를 비롯한 매체를 통해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이날 북한 매체를 통해 중계된 육성 신년사에서 "나라의 분열상태를 종식시키고 통일을 이룩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북과 남 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는 것은 북남관계를 진전시키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근본 전제"라고 밝힘.



역시 이날 신년사 해설 기사를 통해 "2012년 위성발사, 그다음 단계의 목표는 이미 예고돼 있다"며 "인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감할 수 있는 경제부흥구상의 결실을 맺는 것"이라고 설명함.

- 신문은 이어 "(김 제1위원장은) 경제건설의 성과는 인민생활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명백히 지적했다"며 "나라의 경제사령탑인 내각의 책임과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가 이미 취해지고 있다. 작년부터는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최대의 실리를 보장하기 위한 경제관리의 방법론도 부단히 연구되고 여러 단위에서 귀중한 경험들이 창조됐다"고 기대감을 표시함.
- **北, 탈북자 처벌 강화...벌금도 부과 가능(1/2, 연합뉴스)**
 - 북한이 탈북자에게 기존의 인신구속형 형벌에 더해 벌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매체가 이날 입수한 북한 개정 형법에 따르면 북한은 2009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4월28일과 7월21일, 10월19일 등 세 차례에 걸쳐 형법을 개정했는데, 마지막 형법 개정에서 제27조 '형벌의 종류'에 '벌금형'을 추가했고, 제28조를 통해 부가형벌의 하나인 벌금형을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음.
- **北로켓발사 과학자·기술자, 평양 떠나(1/4, 조선중앙방송)**
 - 북한이 첫 실용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 3호 2호기'의 발사 성공에 이바지한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꾼들이 14일 평양 체류 일정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조선중앙방송이 4일 보도하였음.
 -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인공지구위성 발사 성공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꾼들이 오늘 평양을 출발했다"며 "선군 조선의 종합적 국력을 만방에 과시한 우리의 미더운 과학자, 기술자들을 떠나보내는 수도 평양은 뜨거운 환송 분위기에 넘쳐 있었다"고 전했다.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현영철 군 총참모장 등 고위간부가 이들을 전송했고 과학자, 기술자 등을 태운 버스가 평양 고려호텔을 떠나 도로를 지날 때 곳곳에서 축하와 환송이 목소리가 터져나왔다고 중앙방송은 소개했음.
- **北전역, 김정은 육성 신년사 '열풍'(1/5, 노동신문;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전역에 지난 1일 발표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첫 육성 신년사를 '학습하는 열풍이 불고 있다고 전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일 "김정은 원수님의 역사적인 첫 신년사에 대한 학습 열풍으로 전당이 끓고 있다"며 신년사 학습에 힘을 쏟는 여러 기관을 소개했음.
 - 신문은 "석탄공업성, 금속공업성 당조직 일꾼(간부)들의 학습열의가 높다"며 "석탄공업성의 일꾼들은 신년사 학습을 한해 전투목표 수립과 밀



접히 결부해 실속있게 진행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 신문은 평양시당을 비롯해 함경남도당, 평안남도당, 자강도당, 강원도당, 황해남도당에서 신년사 학습을 하고 있다며 "이 밖에도 함경북도, 양강도, 평안북도, 남포시를 비롯한 각지 당조직 일꾼들은 원수님의 신년사 학습을 일거리를 찾는 사업과 밀접히 결부해 실속있게 진행해나가고 있다"고 북한의 신년사 학습 분위기를 전했다.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5일 북한 양강도 소식통을 인용, "(북한 당국이) 1월10일까지 조직별로 신년사 원문 통달검열을 진행한다"며 "늙은이든 젊은이든 가리지 않고 신년사의 원문을 외울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 北, 평양서 신년사 관철 10만 군중대회 개최(1/5,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TV)

- 북한은 5일 평양 김일성광장에 10여만 명의 평양시민을 모아놓고 '김정은 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한 과업 관철을 위한 평양시 군중대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가 전했다.
- 이날 군중대회 주석단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영림 내각총리, 김기남·최태복·곽범기 노동당 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로두철 내각 부총리, 리병삼 조선인민내무군 정치국장 등 노동당과 내각, 근로단체 간부가 참석했음.
- 최고 지도자의 육성 신년사를 19년 만에 접한 북한에서 '신년사 학습 열풍'이 부는 가운데 평양시에서 가장 먼저 군중대회가 열림으로써 앞으로 각 지방과 직능단체별로 군중집회가 이어질 것으로 보임.

● 北, 로켓 발사 공로자 '영웅 만들기'(1/6, 연합뉴스)

- 북한은 지난해 12월12일 로켓 발사에 성공한 이후 이 프로젝트에 이바지한 과학자·기술자 등 공로자를 평양으로 초청해 20여 일간 머무르도록 하면서 영웅대접을 베풀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이 과거에도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체육선수에게 영웅 칭호를 수여하고 시민을 동원해 대규모 환영회를 열면서 포상한 적은 있지만, 이번 로켓 발사 공로자들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대우를 받았음.
- 이들은 작년 12월15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초청으로 평양에 도착해 다음날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주기 중앙추모대회에 참석하는 것으로부터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특히 추모대회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바로 옆자리에 로켓 개발 총책임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을 앉히며 위성 발사 공로자를 부각했음.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작년 12월22일 '정령'(결정)을 통해 위성 발사 공로자 101명에게 북한 최고의 표창인 '공화국영웅' 칭호를 수여했으며 지난 1일에는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에 김정일훈장을 수여했음.



● 北, 올해 김정은 생일 어떻게 치를까(1/6, 연합뉴스)

-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안정돼 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북한이 올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생일(1월8일)을 어떻게 치를 지가 관심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북한은 지난해 김 제1위원장의 생일을 별다른 행사 없이 지냈지만, 올해는 작년과 달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주기가 지난데다 작년 12월 인공위성 발사까지 성공하면서 김 제1위원장이 '자신의 색깔'을 드러낼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임.
-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김 제1위원장의 집권 2년차를 맞는 북한이 올해는 그의 생일을 임시 휴일로 지정하거나 모종의 행사를 개최해 체제의 안정성과 자신감을 과시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김정은동향

- 12/31, '위성발사' 기여자들에게 보내는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선물 전달식, 12.31 박도춘(黨비서) 등 참가下 평양에서 진행(12.31, 중통·평방)
- 12/31, 김정은 黨 제1비서 및 성·중앙기관들, 12.31 쿠바혁명승리 54돌 즈음 駐北 쿠바대사관에 꽃바구니 전달(12.31, 중통·중방)
- 1/1, 김정은·리설주, 1.1 모란봉악단 신년 경축공연 '당을 따라 끝까지' 관람(1.1, 중통·중방·평방)
 - 김영남, 최영림, 최룡해, 장성택, 현영철, 김격식, 김기남, 최태복, 박도춘, 김영춘, 양형섭, 강석주, 현철해, 김원홍, 리명수,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곽범기, 문경덕, 주규창, 김창섭, 로두철, 리병삼, 조연준, 최춘식 등



■ 기타 (대내 정치)

- 黨 중앙위·黨 중앙군사위·국방위 감사문을 은하수관현악단 창작가·예술인들에게 전달하는 모임, 1.2 김기남 등 참가 下 은하수극장에서 진행(1.3, 중방)
- 최영림(내각총리), 평안남도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와 2.8직동청년탄광 현지요해(1.4, 중통)
- 인민무력부, 1.4 '김정은 신년사 과업관철 군인궐기모임' 4.25문화회관에서 진행(1.4, 중통)
 - 최룡해(軍 총정치국장/보고), 현영철(軍 총참모장), 김격식(인민무력부장), 현철해(제1부부장) 등 참가
- 우주공간기술위에 '김정일훈장'을 수여하는 모임, 1.4 김영남·박도춘 등 참가 下 진행(1.4, 중방)
- 김정은의 '신년사 과업관철' 평양시 군중대회, 1.5 리일환(평양시黨委 비서/ 사회) 및 10여만 근로자들 참가 下 김일성광장에서 진행(1.5, 중방· 중통)
 - 주석단 : 김영남, 최영림, 김기남, 최태복, 양형섭, 곽범기, 문경덕(평양시黨책임비서, 보고), 로두철, 리병삼
- 北, 1.6 '김정은 신년사 과업관철'을 위한 각 道 군중대회들 진행(1.6, 중통)

나. 군사

● 北, '로켓 발사' 우주공간기술위에 김정일훈장(1/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일 '광명성 3호 2호기'의 발사를 성공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에 대해 김정일훈장을 수여하기로 하는 정령을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전함.
- 정령은 '광명성 3호 2호기'의 발사 성공을 '5천년 민족사의 특대사변이자 전 인민적 대경사로 규정하고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가 나라의 첫 실용위성 발사를 성공시킨 쾌승을 이룩해 위대한 장군님(김정일)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고 백두산대국의 무진막강한 국력을 온 세계에 힘있게 과시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했다"고 평가함.

다. 사회·문화

● 北 더 매서운 한파...평양 관문 남포항 '꽂꽂'(1/3, 연합뉴스)

- 한반도에 강추위가 연일 계속되면서 북한 평양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남포항을 비롯한 평안도 앞바다가 꽂꽂 얼어붙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3일 전함.
- 3일 오후 1시 천리안위성 해양탐재체(GOCI)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남쪽으로 대동강 하류부터 북쪽으로 압록강 하류 신의주까지 서한만 전역에 얼음층이 형성됐으며, 서한만은 해안에서 50km 부근 해상까지 해빙(海氷)이 탐지됐다고 기상청은 전함.



- **北 "모란봉악단, 보천보전자악단 계승"(1/3, 조선중앙방송;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체제에서 과감한 공연을 펼치는 모란봉악단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 인기악단인 보천보전자악단을 계승해 출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조선중앙방송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3일 보도함.
 - 조선중앙방송은 3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가 모란봉악단의 창작가 및 예술인들에게 감사문을 전달하는 모임을 열었다며 행사 토론자들이 "원수님(김정은)께서 장군님(김정일)께서 꾸리신 보천보전자악단을 계승하여 우리식의 새로운 경음악단을 몸소 무어주시고(구성하고) 악단의 명칭에 장군님께서 좋아하시던 모란봉이라는 이름을 달아줬다"고 언급했다고 전함.
 - 토론자들은 또 "(김정은이) 선군혁명 영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새로 태어난 악단의 시연회와 공연을 지도하시면서 예술창조 사업의 원칙과 방법으로부터 공연의 주제와 형상 요소들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가르쳐 주셨다"고 주장함.

- **北아동 28%는 발육부진(1/5,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의 5세 미만 어린이 중 여전히 28%가 발육장애이며 15%는 체중미달 상태로 나타났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5일 전했다.
 - 북한 당국이 유엔에 보고한 영양조사 예비보고서에 따르면 나이에 비해 키가 작은 발육장애 어린이의 비율은 27.9%로, 3년 전 32.4%보다 다소 감소했음.
 - 또 나이에 비해 체중이 적은 체중미달 어린이의 비율도 3년 전 20%대에서 15%로 줄었음.
 -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나나 스카우 북한 담당 대변인은 "북한 어린이의 영양상태가 개선되긴 했지만, 국제기준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북한은 WFP가 분류하는 영양불량 고위험 국가군에 속해 있다. 영양실조에 따른 설사,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하는 어린이가 적지 않다"고 밝혔음.
 - 북한 중앙통계국은 WFP,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지원을 받아 작년 9월17일부터 10월8일까지 북한 10개 도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양상태 조사를 진행했음.

- **북한 김정은 집권 후 탈북자 크게 감소(1/4, 르몽드)**

 - 북한에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한국으로 오는 탈북자들이 크게 감소했다고 프랑스의 유력 신문 르몽드가 4일 보도했음.
 - 르몽드는 이날 도쿄발 기사에서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집권 이후 국경 통제를 대폭 강화했다며 이렇게 전했다.
 - 르몽드는 한국 통일부 자료를 인용, 지난해 한국에 온 탈북자 수는 1천 508명으로 2011년의 2천706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고 전했다.
 - 신문은 중국이 지난해 북한 노동자 2만명에게 노동비자를 발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 조치가 중국 산업계에는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고 북한에는 탈북 현상을 막으면서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



상했음.

- **김정은 집권 이후 탈북 더 어려워져(1/5, 미국 뉴욕타임스(NYT))**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집권 이후 주민들의 탈북이 더 어려워졌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5일 전함.
 - 신문은 북한 주민들의 탈북과 남한 정착을 지원하는 인권운동가 김성은(48) 목사의 말을 인용해 탈북자들을 위해 북중 경계지역 북한 병사들에게 쥐야 하는 뇌물 액수가 높아지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 충남 천안 갈렙선교회의 인권운동가들과 탈북 도우미들을 지휘하는 김목사는 "북한 병사들이 자신과 상관들 상납용으로 현금뿐 아니라 모든 것을 요구한다"면서 "그들이 한국 상품에도 맛을 들었다"고 말했다.
 - 인권운동가들과 한국 당국자들은 김정은 체제하에서 북한 주민들을 탈북시키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져 지난해 한국에 도착한 탈북자 수가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 북한 주민들 대다수는 너무 궁핍해 탈북 시도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탈북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며, 북중 경계 통제가 강화되면서 지난해 탈북자가 1천509명으로 전년에 비해 44%나 감소했음.

- **北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새 단장(1/6,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새해를 맞아 인터넷 홈페이지를 세련되게 개편했다고 전함.
 - 연합뉴스가 6일 조선중앙통신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화면 상단에 지난해 북한 선수들의 런던올림픽 수상, 희천발전소 준공,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4월15일)을 기념한 '축포야회(불꽃놀이)' 등의 장면을 담은 사진 20여 장을 편집한 부분이 신설됐고 이 사진들을 각각 클릭하면 관련된 설명으로 연결됨.
 - 조선중앙통신의 기존 홈페이지는 글 기사 위주로 편집이 단순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사진과 영상 등 시각적 효과를 강화한 것이 특징임.
 - 북한은 2010년 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일(10월10일)에 맞춰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를 개설했고 현재 국문, 영문,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서비스를 하고 있음.

- **북한전문가들, 이제 출산도 공부해야 할 판(1/6, 르몽드)**
 - 프랑스의 유력 신문 르 몽드는 6일 한국에서 북한 퍼스트레이디 리설주의 출산설이 무성하다고 보도했다고 전함.
 - 르 몽드는 한국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부인 리설주가 작년 10월부터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이후 여러 소문이 나돌았다며 한국 언론은 최근 보도된 리설주의 '날씬해진' 모습의 사진과 TV 화면



등을 토대로 출산설을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北, 광명성-3호 2호기 발사 성공 관련 새 우표(소형전지 1종) 발행 (12.31,중통)

2. 대외관계

가. 일반

- 중국 투먼, 북한 애니메이션 제작 인력 도입(1/1, 애니메이션산업망(動漫產業網))
 - 중국이 북한과 접경한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투먼(圖們)시에 북한 애니메이션 인력을 도입해 관련 산업 촉진을 꾀하고 있다고 중국 애니메이션산업망(動漫產業網)이 1일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투먼시 청하오미디어제작(誠浩媒體製作)유한회사는 지난해 8월 투먼시 경제개발구에 입주해 자본금 40만 위안(약 7천만원) 규모의 애니메이션 제작 외주업체를 설립함.
 - 해당 업체는 투먼시 정부의 지원 아래 북한에서 애니메이션 고급 기술 인력 29명을 도입하고 상하이(上海) 미술영화제작소, 장쑤(江蘇)성 소재 유명 만화기업과 장기 합작계약을 맺는 등 본격적인 수주에 나섰으며, 지난해 말까지 4개월간 220분 분량의 애니메이션 작품을 제작해 500만 위안(약 8억6천만원) 이상의 생산액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함.
- 北고려항공, 베이징-평양 노선 주 5회로 증편(1/3,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의 고려항공이 베이징에서 출발해 평양으로 들어가는 노선을 주 5회로 증편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보도함.
 - 중국에 사무실을 둔 북한 전문 여행사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Young Pioneer Tours)'는 "원래 고려항공은 일주일에 3회 베이징발 여객기를 운항했다"며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에 고려항공을 이용해 베이징에서 평양으로 갈 수 있다고 전함.
 - 또 고려항공이 평양에서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으로 가는 항공편도 일주일에 4번에서 6번으로 늘렸다고 "북한과 단둥 간 사업상 방문이 늘어나 취한 조치로 해석된다"고 설명함.



- **北 "美 도발책동 세계에 위협"…새해 첫 대미 언급(1/4, 노동신문)**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미제의 새로운 조선전쟁도발책동은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미국이 북한에 대한 무력침공을 발판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고 비난함.
 - 신문은 이날 국제면(6면)에 게재한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한 투쟁'이라는 글에서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핵전쟁 위협이 가장 짙은 곳인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근원이 제거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함.
 - 신문은 이어 "미제는 제2조선전쟁을 준비함에 있어 남조선을 거점으로 삼고 여기에 침략무력을 집중진개하는 것과 함께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 및 하와이를 비롯한 넓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까지 방대한 무력을 배치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조선반도정세를 긴장하게 만들고 전쟁위험을 산생시키는 근원은 미제의 남조선 강점과 그로 인한 조선의 분열에 있다"며 주한미군 철수 문제도 간접적으로 거론함.
 - 신문은 또 이날 '지주와 정의의 길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글에서도 "냉전 종식 후 미국은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면서 일극화된 세계를 수립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했다"며 "시대착오적 망동"이라고 거듭 비난함.

- **슈미트 구글 회장 "금주 방북한다" 확정(종합)(1/6, 크리스천사이언스 모니터(CSM); AP통신)**

 -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과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의 방북 계획에 대해 미국 정부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은 이번 방북이 북한은 물론 아시아 동맹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와 AP통신 등이 6일 진단했음.
 - 북한을 압박해야 하는 현 시점에 이들의 방북이 김정은 북한 지도자의 사기를 오히려 올려주는 역효과를 낼 수 있어 미 정부로서는 달갑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임.
 - 미국은 지난해 말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이후 동맹국들과 대북 추가 제재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미사일 발사와 같은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서임.
 - 미 국무부가 이들의 방북 계획이 발표된 이후 "방북 시점이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거나 "미국 정부의 메시지는 가져가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으며 사실상 불쾌감을 표시한 것은 그런 배경에서임.
 - 미 정부는 고위급 인사의 방북이 아시아 동맹국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한다고 외신은 전했으며, 국무장관 교체를 앞둔 미국의 대북 정책이 변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게 근거임.

- **중국서 실종 美 유학생, 북한서 영어교사 정보(1/6, 산케이신문)**

 - 지난 2004년 중국에서 실종된 미국 유학생 데이비드 루이스 스네든이 북한에서 영어교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6



- 일 보도했음.
- 이 신문은 과거 미국 국방부에서 북한과의 교섭을 담당했던 척 다운스 북한인권위원회(HRNK) 전 사무총장의 말을 인용해 스네든이 평양의 만경대혁명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전했다.
 - 다운스씨는 "한국에 거주하는 복수의 탈북자로부터 스네든으로 보이는 미국인 남성이 평양의 조선노동당과 인민군 간부 자녀를 외교관과 첩보원으로 양성하는 만경대혁명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말했음.
 - 그는 또 작년 4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북한과의 비공식 접촉 당시 만났던 북한의 젊은 외교관이 미국 중서부에서 교육 받은 스네든의 표준적 영어에 합치하는 발음과 표현을 유창하게 사용했던 것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음.
 - 유타주 출신의 스네든은 중국에 유학 중이던 2004년 8월 윈난성에서 실종됐으며, 당시 24세였으며, 스네든이 실종된 뒤 일본과 한국의 납북자 관련 단체는 북한 피랍설을 제기했음.
 - 산케이신문은 "당시 스네든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북한 공무원에 인계돼 미 안마를 경유, 평양으로 납치된 것 같다는 의혹이 부상했다"고 보도했음.

■ 기타 (대외 일반)

- '쿠바 혁명승리의 날(1.1)' 관련 "반제자주, 사회주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쿠바 인민의 위업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연대성 표명(1.2, 중통·노동신문/쿠바 인민의 정의의 위업)
- 발전도상 나라들은 '미국 등 서방세력의 경제적 예측과 악탈을 반대하고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남남협조를 강화해 공동번영을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1.3, 중통·노동신문/남남협조를 위한 발전도상 나라들의 노력)

나. 6자회담(북핵)

● 북한, 3개월내 핵실험 가능성 작아(1/4, 연합뉴스)

- 북한이 최소한 3개월 안에는 핵실험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나왔다고 4일 연합뉴스가 전함.
- 산디프 미슈라 델리대 동아시아학과 조교수(한국학)는 4일 인도 민간연구소인 '평화와 분쟁 연구소'(IPCS)가 주최로 뉴델리에서 열린 '한국 대선과 일본 총선 결과에 관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음.
- 인도에서 한국문제 전문가로 통하는 미슈라 조교수는 "북한은 박근혜 당선인이 취임해 대북정책 윤곽을 제시하는 것 등을 일단 지켜본 뒤 핵실험 강행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진단했음.
- 그는 또 북한이 지난달 한국의 대선 직전 로켓을 발사해 대선에 개입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미슈라 조교수는 "남북관계는 단순한 양자관계가 아니라 중국, 미국 등이 개입돼 있는 복잡한 관계"라며 "남북관계 개선에 중국과 미국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음.

3. 대남동향

가. 정치·군사

● 北국방위 "南당국, 대결과 대화 중 선택해야"(1/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일 이명박 정권이 연초부터 동족대결 정책을 펴고 있다며 남한 정부가 대결과 평화 가운데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함.
-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담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전날 북방한계선(NLL) 사수 발언과 김관진 국방장관의 새해 첫 장관 서신, 서부전선 애기봉의 등탑 점등 등을 언급하고 "새해 벽두에 나타난 이명박 역적 패당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과 관련해 몇 가지 입장을 천명한다"며 "보수와 대결에 체질화된 반역의 무리들은 그대로 살아 숨 쉬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힘.
- 대변인은 이어 "오늘 북남관계는 지난 5년처럼 또다시 대결과 전쟁이나, 아니면 대화와 평화냐 하는 엄숙한 기로에 놓여 있다"며 "남조선 당국은 책임적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또한, "전쟁도, 평화도 아닌 정전상태를 완전히 종식시켜버리지는 것이 우리의 변함 없는 입장"이라며 "통일된 강성국가를 기어이 일떠세우기 위하여서는 크고 작은 그 모든 전쟁도발행위를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함.
- 마지막으로 "모든 호전세력들은 우리가 이미 내외에 성전을 포고한 상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 혁명무력은 존엄 높은 최고사령부가 이미 최종비준한 작전계획들을 받아 안은 상태"라고 위협함.

● 北 "남북관계 바로잡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1/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3일 남북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주장함.
- 조평통은 이날 대변인 성명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1일 북방한계선(NLL) 사수 발언 등을 언급하고 남한 당국이 연초부터 동족대결에 매달리고 비난하고 "북남관계를 바로잡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는 것은 전체 조선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영원이며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밝힘.
- 또 "민족의 재난을 막으려면 온 겨레가 우리민족끼리의 기치 밑에(아래) 힘을 합쳐 반통일대결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며 "우리는 남조선 당국의 금후 태도를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함.



● 北, 南정부 연일 비난…"파멸 면치 못할 것"(1/4,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북한이 이명박 정부가 연초부터 대결소동을 벌이고 있다며 잇달아 비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4일 논평에서 지난 1일 이명박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사수 발언, 북한의 성동격서(聲東擊西)식 도발 가능성에 대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발언, 보수단체의 대북전단지 살포 등을 거론하고 "역적패당의 대결광란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염원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동족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는 자들은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음.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전날 남한 당국이 연초부터 동족대결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하며 남한의 태도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2일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도 담화에서 남한 정부가 대결과 대화 사이에서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음.
- 북한이 대남기구와 매체를 동원해 이명박 정부를 거칠게 비난하는 것은 다음 달 공식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에 다른 대북정책을 펴기를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임.

● 北, 통일열기 점화…南차기정부에 유화 제스처(1/6, 조선중앙TV; 노동신문;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정권이 새해 들어 통일 분위기를 고조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은 지난 1일 이명박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사수 발언 등을 '동족대결광란'이라며 남한 정부를 연일 비난하지만 다른 한편 북한 매체에서는 통일과 민족 화해에 관한 내용이 부쩍 늘어나는 양상임.
-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모란봉악단의 신년 경축공연 '당을 따라 끝까지'가 연일 진행되고 있다며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삼천리 강토 위에 통일되고 변영되는 강성국가를 기어이 일떠세울 겨레의 의지를 반영한 여성중창 '백두와 한나(한라)는 내 조국'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 6·15'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는 공연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고 밝혔음.
-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 경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음악회에 통일을 주제로 한 노래가 여러곡 선보인 것은 흔치 않은 일임.
- 조선중앙TV가 방송한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보면 무대 뒤편의 대형 스크린에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각각 2000년과 2007년 방북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손을 맞잡은 사진이 여러 차례 나옴.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일 '백두산 위인들의 필생의 염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통일이 김 주석과 김 위원장이 간곡한 유훈이라며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민족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노동신문은 4일에는 '조국통일의 주인은 우리 민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이 겪는 고통과 불행을 하루빨리 가시기 위해서도 사활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 **北 조평통, 천영우 수석 원색 비난(1/6,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6일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것을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했음.
- 조평통 서기국은 이날 '보도'에서 지난 4일 모 일간지에 실린 인터뷰에서 천 수석이 '원칙있는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의 틀을 본질적으로 변화시켰다' '북한이 나를 강경파로 만들었다' '북에 돈을 주고 평화를 사는 것은 안된다' 등의 발언을 했다며 "천영우놈이 언론에 나서서 이명박 역도의 대결정책을 합리화하는 궤변을 늘어놓는 망동을 부렸다"고 주장했다.
- 이와 함께 조평통은 이명박 정권이 새 집권 세력에 대결정책의 연장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명박 역도 패당의 극악한 동족대결정책이 그대로 이어지게 되면 남조선 인민들에게 차례질(닥칠) 것은 더 큰 불행과 재난 뿐"이라고 위협
- 북한이 천 수석을 비난한 것은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이명박 정부에 책임으로 돌리면서 남한의 차기 박근혜 정부가 다른 대북정책을 펴기를 촉구하려는 의도로 보임.

나. 경제·사회·문화

● **남북협력기금 집행률 4년 연속 한자릿수(1/6, 연합뉴스)**

-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이 4년 연속 10%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통일부는 6일 2012년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이 6.9%로 집계됐다고 밝혔으며, 총 사업비 1조60억300만원 가운데 693억7천600만원이 집행됐음.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지원하는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은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급격히 떨어졌음.
-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82.2%에서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18.1%로 급락한 뒤 2009년 7.6%, 2010년 7.7%, 2011년 4.2%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했음.
- 지난해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은 2011년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2009년부터 4년 연속 한자릿수를 기록했다.
- 지난해 남북협력기금 주요 집행 내역은 개성공단 출퇴근 도로 개보수 및 버스 회차장 확장(31억원), 개성공단 응급의료시설 건립(21억원), 남북 교역·경협 기업 등에 대한 무상 운영자금 지원(52억원) 및 특별대출(182억원), 국제백신연구소(IVI)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23억원),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 지원(148억원) 등임.

■ 기타 (대남)

- 「조평통」 대변인 성명(1.3), 대통령·통일부장관 등의 對北발언(NLL 사수, 나쁜 선택 등) 관련 '동족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는 자들은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난하며 '南 당국의 금후 태도를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1.3,중통·중방)
 - ① 민족의 재앙을 막으려면 그 화근을 뿌리채 들어내야 함. ② 동족대결에 매달리면 전쟁을 피할 수 없음. ③ 온 겨레가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반통일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 나서야 함.
-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1018호, 천영우 수석이 문화일보 인터뷰(12.27)시 한 對北발언들 관련 '안팎에서 얻어맞고 만신창이 된 이 OO패당의 체면을 조금이라도 세우고 차별화해 보려는 새집권 세력에게 못을 박기 위한 술책'이라고 비난(1.6,중통·중방)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정부, 안보리 이사국 활동개시..北로켓대응 직접참여(1/2, 연합뉴스)**
 - 올해 1월1일부터 우리나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임기가 시작되면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후속조치 논의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됨. 지난해 11월부터 차기 이사국 자격으로 안보리 회의를 참관한 우리나라는 이달부터 이사국으로서 회의에 공식 참여, 입장 표명과 문안 교섭에 직접 관여할 수 있게 됨. 정부 관계자는 2일 "지난 12월과 1월 두 달만을 갖고 비교해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서 "이사국이 됐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매우 많다"고 밝힘.
 -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 유엔 안보리의 대응 논의가 구체화하기까지는 최소 1주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안보리는 북한의 로켓 발사 다음날인 지난달 13일 새벽(한국시간) 긴급회의를 소집, 북한의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안 위반임을 확인하고 후속조치 논의에 착수했지만 3주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 대북 조치의 형식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음. 이는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국이 대북제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대응방향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짐.
 - 북한의 로켓 발사에 강경한 미국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강한 대북제재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음. 외교 소식통은 "본격적인 협상은 다음주 초나 돼야 할 것"이라면서 "내주 초나 돼야 윤곽이 잡힐 수 있다"고 말함. 이 소식통은 "아직 2차회의 일정이 잡힌 것은 없지만, 중국이 진전된 입장을 내놓는다면 예상보다 논의의 속도가 붙을 수도 있다"고 전망함.

- **美하원, 새해 첫날 '北로켓 규탄' 결의안 통과(1/3, 연합뉴스)**
 - 미국 하원이 새해 첫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강행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킴. 2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하원은 지난 1일 오후 11시16분께 대북 결의안을 구두투표(voice vote)로 반대 없이 (without objection) 가결 처리함. 하원이 '재정 절벽(fiscal cliff)' 타개를 위한 상원 합의안을 공방 끝에 투표에 부쳐 통과시킨 직후임. 이에 따라 하원의 대북 결의안은 제112대 의회 임기 내에 사실상 만장일치로 처리됨.
 - 하원 외교위원장인 일리애나 로스-레티넨(공화·플로리다) 의원이 대



표발의하고 11명의 민주·공화 양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결의안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여러 결의를 위반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 또 중국에 대해 대북 제재에 적극 참여·협조하고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결의안은 아울러 언론 보도 등을 인용해 "북한과 이란이라는 두 '불량국가'가 1980년대부터 미사일 개발을 위해 광범위한 협력을 유지해왔음을 보여 준다"고 지적했음.

나. 미·북 관계

● "작년 美입국 탈북난민 총 23명" <美보고서>(1/3, 연합뉴스)

- 지난해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가 총 23명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미국 국무부의 난민입국보고서를 인용해 3일 보도함.
-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난민 자격을 얻어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1월 2명, 5월 2명, 6월 5명, 7월 6명, 8월 4명, 9월 1명, 12월 3명 등으로 각각 집계됐음. RFA는 2010년(17명), 2011년(16명)에 비해 지난해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수가 증가하긴 했지만 2004년 7월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래 난민자격을 받고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총 149명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 RFA는 이어 "해마다 미국이 받아들이는 동아시아 국가 출신 난민 1만5천명~2만명 중 약 80%를 차지하는 버마(미얀마) 난민의 수에 비하면 이는 극히 적은 숫자"라고 지적한 뒤 미국 정부가 탈북자의 인도적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대북인권단체 '헬핑 핸드 코리아'의 팀 피터스 대표의 말을 전함.
- RFA는 미국에 정착하는 탈북자를 돕기 위한 미국 내 탈북자들의 모임 '재미탈북연대(NKUS)'가 지난해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를 중심으로 결성됐다는 소식도 함께 소개함.

● 美정부 "구글 회장 방북 시점 도움 안돼"(1/4,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3일(현지시간)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과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가 이르면 이달 중 북한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시점상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힘.
- 빅토리아 놀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그들은 미국 정부 당국자와 동행하지 않는다"면서 "우리(정부)로부터 어떤 메시지도 가져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놀런드 대변인은 특히 "솔직히 우리는 (방북) 시점이 특별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최근 북한의 행동을 감안했을 때 그렇다"고 강조함.
- 지난달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장거리로켓 발사를 강행한 직후 유엔 안보리 제재 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북 계획이 나온 데 대해 사실상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됨. 그는 다만



"그들도 우리의 생각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들은 비공식적인 차원에서 여행하는 것이며,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함.

- 이어 놀런드 대변인은 이들의 방북이 최근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배준호(미국명 케네스 배) 씨 석방과 관련 있다는 관측에 대해 "그들은 우리를 대표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부인했음. 그러면서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 시민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북한과 접촉하고 있다"면서 "그들(스웨덴 대사관)은 영사적인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음.
 - 아울러 그는 구글의 북한 내 사업 가능성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구글도 다른 모든 미국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법이 규정한 제한을 받는다"고 지적했음. 그는 또 '구글이 북한의 인터넷을 통한 국제사회 접근에 도움이 된다면 바람직한 일인가'라는 질문에도 "우리는 인터넷 자유를 지지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제한에 반대한다"면서도 "북한과 관련해서는 모든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재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 이에 앞서 AP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슈미트 회장과 리처드슨 전 주지사가 이르면 이달 중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서울발로 보도했음. 놀런드 대변인은 "이번 여행과 관련해서 잘 알고 있다"며 이들의 방북 계획이 사실임을 확인했음.
- "중국서 실종 美 유학생, 북한서 영어교사 정보"(1/6, 연합뉴스)
- 지난 2004년 중국에서 실종된 미국 유학생 데이비드 루이스 스네든이 북한에서 영어교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6일 보도함.
 - 이 신문은 과거 미국 국방부에서 북한과의 교섭을 담당했던 척 다운스 북한인권위원회(HRINK) 전 사무총장의 말을 인용해 스네든이 평양의 만경대혁명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전함. 다운스씨는 "한국에 거주하는 복수의 탈북자로부터 스네든으로 보이는 미국인 남성이 평양의 조선노동당과 인민군 간부 자녀를 외교관과 첩보원으로 양성하는 만경대혁명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말함. 그는 또 작년 4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북한과의 비공식 접촉 당시 만났던 북한의 젊은 외교관이 미국 중서부에서 교육 받은 스네든의 표준적 영어에 합치하는 발음과 표현을 유창하게 사용했던 것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힘.
 - 유타주 출신의 스네든은 중국에 유학 중이던 2004년 8월 윈난성에서 실종됐으며, 당시 24세였음. 스네든이 실종된 뒤 일본과 한국의 남북자 관련 단체는 북한 피랍설을 제기했음. 산케이신문은 "당시 스네든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북한 공무원에 인계돼 미안마를 경유, 평양으로 납치된 것 같다는 의혹이 부상했다"고 보도함.



다. 중·북 관계

● 중국 단둥-평양 직통열차 증편...매일 운행(1/1 연합뉴스)

- 북한과 접경한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에서 평양을 연결하는 직통열차가 증편돼 올해부터 매일 운행한다고 현지 매체인 압록강만보가 1일 보도함.
- 신문은 관광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단둥-평양을 오가는 승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까지 주 4회 운행했던 직통열차를 이날부터 매일 운행하기로 했다고 전함. 단둥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한 열차는 당일 오후 5시45분 평양역에 도착함. 북한은 겨울이 되면 눈이 많이 내리고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탓에 전력을 사용하는 열차도 천천히 움직여 운행시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짐.
- 북한과 국경을 맞댄 랴오닝성은 지난 1988년 북한 관광을 시작해 단둥에서 기차나 버스를 타고 압록강을 건너 신의주, 평양, 금강산 등지로 향하는 관광코스를 운영하고 있음.

라. 일·북 관계

● 북한, 일본 아베 정권에 협상 재개 타진(12/31, 연합뉴스)

- 북한이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 정부 간 협상 재개 의사를 타진했다고 교도통신이 31일 보도함. 북한은 자민당이 압승해 정권을 장악한 지난 16일 총선 직후 내년 2월을 목표로 정부 간 협의 재개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일본 측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는 것임.
-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예고를 이유로 연내 추진했던 북한과의 국장급 회담을 연기했음. 교도통신은 북한이 회담 재개를 타진한 것은 남북자 문제에 유연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대북 강경 자세를 취하고 있는 아베 정권을 흔들어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함.
- 일본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새로운 미사일과 핵실험 등 도발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도 있어, (대화 타진의) 진의가 무엇인지 불투명하다"면서 북한의 의도를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함. 일본과 북한은 북한에 있는 일본인 유골 반환 문제 등과 관련 약 4년 만인 지난 8월 외교 당국 과장급 대화를 재개한 데 이어 11월 15~16일에는 몽골에서 국장급 회담을 했음. 국장급 회담 당시 양측은 남북자 문제를 포함해 협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달 초 2차 국장급 회담을 할 예정이었음.
- 한편, 마이니치신문은 북한이 지난 11월 국장급 교섭 당시 '남북자 문제는 해결이 끝났다'던 기존 입장의 철회를 일본 측에 시사했다고 보도했음.. 이 신문은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송일호 북일 교섭 담당대사가 양측 대표로 참석한 당시 회담에서 북한의 송 대사는 '어떻게 하면 일본이 남북자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인정할 것인지 기준을 제시하도록 요구했다고 전했다.
- 송 대사는 북한이 일본인 납치를 인정하고 사죄한 2002년의 '평양선언' 이후 피랍자 5명을 귀국시키고 피랍자 재조사 의향을 밝혔음에도 일본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제재를 강화했다고 비난하고 납북자 문제의 '출구'를 설정하도록 일본 측에 요구했다는 것임.

- 아베 총리는 28일 총리관저에서 납북 피해자 가족들과 만나 "납북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말뿐이 아니라 성과를 내고자 매일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함.

마. 기 타

● 르피가로 "북한, 한국에 화해 제스처"(1/3, 연합뉴스)

-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는 2일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한국에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다고 보도함.
- 르 피가로는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 제1위원장이 TV로 중계된 신년사를 통해 "한반도의 분단을 종식시키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과 남이 대결을 중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며 이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새해 벽두에 한국에 화해의 손길을 내민 것이라고 전함. 신문은 김정은의 TV 연설은 의외라며 북한 지도자가 TV로 연설한 것은 19년 전 김일성 전 주석 이래 처음이라고 말했다.
- 김정은 제1위원장은 또 경제대국을 건설을 위한 결정적 전환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주장은 실제로 이행돼야 한다고 신문은 지적함. 특히 르 피가로는 그가 언급한 경제대국 건설의 결정적 전환은 "모든 분야에서 군사대국이 되는 조건에서만 발전할 수 있다"는 것과 상반되는 내용이라면서 북한에서는 여전히 군부가 우선순위의 것 같다고 분석함.
- 신문은 이어 작년 12월 위성 발사 성공으로 김정은의 권력이 더욱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임.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지휘구조' 논의 착수(1/4, 연합뉴스)

- 한미 군 당국이 전시작전권 전환과 한미 연합사령부 해체 이후 연합지휘구조를 논의하기 위해 '미래지휘구조 연합실무단'을 구성함.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가 지난해 10월 개최된 제44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합의에 따라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지휘구조를 검토해왔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연합실무단을 지난달 21일 만들었다"고 밝힘. 연합실무단의 우리 측 대표는 합동참모본부 신연합방위추진단장인 박찬주 육군 소장이, 미국 측 대표는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인 마이클 레그너 해병 소장이 각각 맡았음. 양국 대표를 공동단장으로 한 연합실무단에는 20여명의 영관급 이상 장교가 참여하고 있음.



- 김 대변인은 "3월까지 실무협의를 우선 진행하고 4월 한미 합참의장간 협의를 거쳐서 오는 10월 SCM 때 양국 국방장관이 (미래지휘구조를) 합의할 계획"이라며 "올해 상반기 중 안이 나오면 여름에 있는 을지훈련 때 이를 가지고 한 번 연습할 계획"이라고 말함.

● **美하원 외교위원장 이달 말 방한..차당선인 만날 듯(1/4, 연합뉴스)**

- 3일(현지시간) 출범한 제113대 미국 하원의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신임 외교위원장이 이달 말 방한함. 이날 미국 의회·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로이스 위원장은 이달 말 아시아를 순방하면서 한국과 대만, 중국을 찾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최근 로이스 위원장 측으로부터 대만과 중국에 가는 길에 한국에 들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을 짜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함.
- 로이스 위원장실은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박 당선인 및 다른 정치인 등과의 면담 일정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음. 주미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한국 방문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세부 일정 등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함. 로이스 위원장은 우리나라를 찾을 경우 박 당선인과 회동해 한·미 동맹과 대북 정책, 동북아시아 지역 현안 전반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일리아나 로스-레티넨(공화·플로리다) 위원장의 뒤를 이어 새로 출범한 하원의 외교 수장을 맡은 로이스 위원장이 첫 방문지로 아시아를 선택한 것은 그만큼 미국 외교에서 이 지역의 중요성이 커졌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풀이됨. 또 자기 지역구의 소수민 유권자는 대만계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한국계임. 로이스 위원장은 미국 상·하원의원 가운데 대표적인 친한파이면서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경론자로 분류됨.
- 그는 대북 식량(영양) 지원이 독재 정권 강화에 악용된다면서 북한에 대한 식량 제공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대북 강경책을 써야 한다고 주장해왔음. 지난해 12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기 직전에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 해외 자금줄을 끊는 등 강력한 금융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한편 이달 중순에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상당수 워싱턴DC로 건너와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 세미나에서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와 한국 새 정부의 바람직한 한·미 관계 등을 모색함. 방미 의원은 김세연(김영우 박민식 황영철(이상 새누리당), 노웅래 문병호 서영교 윤관석(이상 민주통합당) 의원임.

나. 한·중 관계

● **중국 장즈진 외교부부장 9일 방한...특사 자격(1/4, 연합뉴스)**

- 장즈진(張志軍)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정부 특사 자격으로 9~11일 한국을 방문함. 외교부의 수석 부부장인 장즈진은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



- 들어간(簾)의 뒤를 이어 외교부장 승진이 유력시되는 중량급 인사임.
-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장 부부장의 한국 방문 소식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정세 속에서 한국 측과 양자 관계와 기타 공통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힘. 화 대변인은 장 부부장이 한국을 방문해 누구를 만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음.
- 장 부부장은 박근혜 당선인을 예방,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시진핑(習近平) 공산당 총서기의 친서를 전하고 한중 관계 발전 방안 및 대북 정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장 부부장은 방한 기간 한국의 외교 당국자들과도 만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의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공조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보임.

● **中, '韓법원 류창 일본 인도 거절 판결 환영 표해(1/4, 인민일보)**

- 외교부 관영 홈페이지가 전한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이 3일 류창(劉暢) 사건 관련 한국 법원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힘.
- 한국 서울고등법원은 3일 류창 일본 인도 안전과 관련해 일본 측의 인도 요구를 거절하는 재판 결과를 내놓았는데 중국은 이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변인은 "1월 3일, 한국 서울고등법원이 류창 일본 인도 안전과 관련해 일본 측의 인도 요구를 거절한다는 재판 결과를 내놓은 것에 대해 중국은 환영을 표한다. 류창은 적절한 조치를 통해 곧 귀국하게 될 예정이다"라고 답변함. 더불어 "중국 정부는 해외 중국인에 대한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매우 중요시 하고, 한국 주재 중국대사관 측에서 여러 차례 사람을 파견하여 책임 범위 안에서 류창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했다"라고 덧붙임.

다. 한·일 관계

● **일본 정부, 야스쿠니 방화범 인도 거부 결정에 항의(1/3, 산케이신문)**

- 한국의 고등 법원이 야스쿠니 신사에 방화한 중국인을 일본에 인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3일, 서울의 일본 대사관을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하며 인도를 요구함. 류창 같은 날 밤, 서울의 구치 시설로부터 석방되어 중국 대사관의 관계처에 이송되고 있었음. 일중 간에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고, 중국 측은 류창을 사실상 "보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류창을 일본 경찰이 야스쿠니 신사 방화 사건의 용의자로서 조사하는 것은 어려워졌음.

● **日 총리 "야스쿠니 방화범 인도 거부 매우 유감"(1/4, 연합뉴스)**

-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한국 법원의 야스쿠니 방화범 인도 거부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함.
- 아베 총리는 4일 미에(三重)현 이세(伊勢)시에서 취재진에게 한국 법원



이 일본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 "사실상 조약을 무시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라며 "항의하겠다"고 말함. 아베 총리는 이날 연말연시 연휴를 끝낸 뒤 일본 신사인 이세신궁에 참배하러 간 길에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응답함.

- 일본 외무성의 가와이 지카오(河相周夫) 사무차관은 이날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함. 가와이 사무차관은 야스쿠니 방화 시도는 한일 범죄인인도조약상 인도를 거부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며 한국 법원의 결정은 매우 유감이라고 항의하고 향후 한국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함. 전날 법원의 결정 직후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는데 이어 한 단계 항의 수위를 높인 것임.
-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이세신궁 참배길에 취재진에게 "정치범은 정치적인 사상·신념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을 가리킨다"며 "(야스쿠니 방화범은) 정치범과 달리 방화라는 형사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느냐"며 한국 측 결정을 비판했음.
- 일본 여야 당수의 연초 이세신궁 참배는 연례행사이며, 일본 총리는 관례상 참배를 끝낸 뒤 이세신궁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엮.

● 누카가 특사 "일한 관계가 최대중요" 아베 수상 메시지 전달(1/4, 산케이신문)

-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郎)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은 아베 신조 수상의 특사로서 한국을 방문해 박근혜 차기 대통령과 서울에서 회담함.
- 누카가씨는 한국에 출발하기 전, 하네다 공항에서 기자단에게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해서도 일한 관계가 제일 소중하다는 수상의 생각"을 전할 의향을 표명함. 시마네현·타케시마(한국명·독도) 문제로 차가워진 일한 관계의 개선을 향한 메시지를 박근혜 당선인에게 전했다고 보임.
- 수상의 친서를 가지고 간 누카가씨는 가까운 시일 내 일한 정상회담의 실현도 요청 할 것으로 보임. 누카가씨는 4일 오전에 하네다 공항에서 "올해는 일한 각각 새로운 정권이 시작을 한다. 양국에 있어서 좋은 해가 되도록 가교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입장을 밝혔음.

라. 미·일 관계

● 일본 방위성 간부 방미... "방위협력지침 개정 논의"(1/3, 연합뉴스)

- 일본이 조만간 방위성 간부를 미국에 보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3일 보도함.
- 방위협력지침의 개정은 민주당 정권 당시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방위상의 지시로 추진됐음. 지난해 8월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방위협력지침 개정 논의를 한다는데 합의함. 일본은 중국의 해양 진출과 관련해 미군과 자위대의 협조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음.
-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집권 후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중장기 방위력 운용 지침인 방위계획대강 개정 등에 의욕을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논의하기 쉬운 주제인 방위협력지침 개정 문제에 먼저 손을 대는 모양새임. 하지만 미국이 일본만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적극적이지는 의문임. 미국 일각에서는 개정 효과나 긴급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기 때문임.

-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일본이 공격당했을 때 미군과 자위대의 역할 분담 방안을 명시한 문서임. 1978년 소련의 일본 공격을 예상해 처음으로 만들었고, 1997년 한반도 유사 사태를 상정해 개정했음. 일본은 1997년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한 뒤 1998년에는 주변사태법까지 제정함.

● NYT "日 '아베 담화'는 중대 실수" 강력 비판(1/4, 연합뉴스)

-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 일간 신문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과거사 부정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표시함.
- NYT는 이날 '일본의 역사를 부정하려는 또 다른 시도'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보다 아시아의 안정에 더 중요한 관계는 없다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아베 총리는 한·일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협력을 더욱 어렵게 만들 '중대한 실수'(serious mistake)로 자신의 임기를 시작하려는 것 같다고 지적함.
- 신문은 극우 국수주의자인 아베가 최근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다른 나라의 여성들을 '성노예'(sex slaves)로 강요한 것을 포함해 2차 대전 당시의 침략 행위를 사과한 1993년의 고노 담화와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를 수정한 새로운 담화를 발표할 방침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설명함.
- 사설은 고노 담화는 일본군이 수천 명의 여성을 성폭행해 노예로 만든 것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이러한 잔혹 행위에 대한 철저한 사과를 구한 것이며, 무라야마 담화는 식민 지배와 침략으로 여러 국가와 국민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준 데 대해 폭넓게 사죄한 내용을 담았다고 구체적으로 소개함.
- 타임스는 아베 총리가 전임 내각(2006~2007)이 성노예로 살았던 여성들이 강요당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을 기존 담화 수정의 이유로 내세웠지만,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지난주 "아베가 고노 담화는 수정해도 무라야마 담화는 계승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음.
- 또 아베가 기존 담화를 어떤 방향으로 수정할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거의 침략 역사를 다시 쓰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피력해 왔다는 점을 상기시켰음. 그러면서 '범죄'(crimes)를 부정하고 사과를 희석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일본의 짐승 같은 전시 지배로 고통을 겪은 한국과 중국, 필리핀 등의 분노를 촉발할 것이며 특히 아베의 '수치스런 충동'(shameful impulses)이 북한 핵 문제 등의 지역 이슈에서 중요한 협력관계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경고함.
- 타임스는 이러한 수정주의가 과거사에 대한 '눈속임'(whitewashing)



대신 장기 침체에 허덕이는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할 일본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 **美 뉴욕주 의회서도 위안부 결의안 추진(1/5, 연합뉴스)**

- 미국 뉴저지주에 이어 뉴욕주 의회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이 추진됨. 4일(현지시간) 재미 한인단체인 한미공공정책위원회(회장 이철우)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군 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일본 정부의 반성과 책임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한 노력이 뉴욕주 상원과 하원에서 동시에 진행됨.
- 주의회 상원에서는 이탈리아계인 토니 아벨라 의원, 하원에서는 유대계인 찰스 라빈 의원이 주도적 역할을 맡고 있으며 늦어도 이달 중에 대표 발의가 이뤄질 예정임. 두 의원이 추진하는 결의안은 위안부 문제를 '아시아 홀로코스트'(Asian Holocaust)의 관점에서 일본의 극악무도한 인권유린 행위를 고발하고 위안부를 '성노예'(sexual slavery) 문제로 부각시켜 일본의 사죄를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위원회 측은 다수의 주의회 의원들이 호응하고 있어 이르면 올 상반기에 결의안 채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앞서 지난해 9월에는 뉴저지주 의회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 2건이 상정됐음. 로레타 와인버그 상원 의원과 고든 존슨, 코니 와그너 의원이 각각 상원과 하원에 발의한 두 결의안 역시 '위안부'(comfort woman)가 아닌 '성노예'란 표현을 사용했음. 특히 한국은 물론 중국과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등을 피해국에 포함시켜 성노예 문제가 단순히 한국과 일본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음.
- 미국 연방 하원에서는 지난 2007년 7월30일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 공식적이고 분명한 시인과 사과, 역사적 책임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음. 연방 의회에서 처음으로 채택된 이 결의안은 위안부 문제를 20세기 최대 인신매매 사건의 하나로 규정했으며, 일본의 새로운 교과서가 위안부 비극과 기타 일본의 전쟁범죄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함.
- 이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인하고 있는 일본 정부 주장의 부당성을 일본의 최대 우방인 미국 의회가 공식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와 파급효과가 컸음. 당시 결의안을 발의했던 일본계 3세 마이클 혼다(민주당) 의원은 1999년 캘리포니아 주의회 상원에서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일본군 강제 중군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음.

마. 미·러 관계

● **〈푸틴, 러-美 갈등 불구 오바마에 신년 축전〉(12/31, 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심각한 외교적 갈등을 겪고 있



는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성탄 및 신년 축하 전문을 보냈다고 크렘린 공보실이 31일(현지시간) 밝힘. 공보실은 푸틴 대통령이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의 주요국 정상들에게도 축전을 보냈다고 덧붙임.

- 푸틴은 오바마에게 보낸 축전에서 "올해 러-미 양국은 선거운동에 따른 모든 어려움에도 상호 대화 분위기를 유지했다"고 평가하면서 "양국이 현재의 분위기에 기반해 여러 분야에서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함.
- 푸틴은 양국이 국제 테러, 조직 범죄, 마약 유통,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 현대적 도전과 위협에 대항하는 데 있어 자연스런 동맹국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함. 푸틴은 2013년으로 예정된 오바마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때 이 문제들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희망도 전함.
- 러-미 양국은 최근 미국이 러시아인 인권변호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 피살 사건에 연루된 러시아 인사들을 제재하는 대(對)러 인권법인 '마그니츠키법'을 채택한 데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가 미국인의 러시아 아이 입양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미 인권법을 채택하면서 외교적 갈등을 겪고 있음. 양국은 이에 앞서 미국이 추진하는 유럽 미사일 방어(MD)망 구축 계획을 둘러싸고도 마찰을 빚어왔음.

● 러시아서 미국인 러시아 아이 입양 금지법 발효(1/1, 연합뉴스)

- 러시아에서 미국인의 러시아 아이 입양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미(對美) 인권법이 1일(현지시간) 발효됨.
-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은 이날 지난달 28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최종 서명한 이 법이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새해 첫날 발효했다며 동시에 러시아와 미국이 체결한 입양 관련 협정도 효력이 중단됐다고 전함. 러시아와 미국이 2011년 7월 체결한 입양 협정은 지난해 11월 발효됐었음.
- 지난 2008년 미국인 양아버지의 부주의로 숨진 두 살배기 러시아 입양아의 이름을 따 '디마 야코블레프 법'으로도 불리는 대미 인권법은 러시아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러시아인에 해를 끼치는 범죄를 저지른 미국인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블랙리스트에 오른 미국인들의 러시아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그들이 러시아 내에 보유한 자산을 동결하고 그들에 의해 운영돼온 단체들의 활동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미국인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거나 러시아의 이익에 위협이 되는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기타 활동을 추진하는 비정부기구(NGO)의 러시아 내 활동도 금지됨. 미국인의 러시아 아이 입양 금지 조항도 법 조항 가운데 하나임.
- 디마 야코블레프 법은 미국이 러시아인 인권 변호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 피살 사건에 관련된 러시아 인사들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은 '마그니츠키 법'을 채택한 데 대한 보복 차원에서 입법됐음. 미국은 지난해 12월 14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거쳐 마그니츠키 법을 채택



했음.

- 디마 야코블레프 법 발효로 한해 수백 명에 이르던 미국으로의 러시아 아이 입양이 완전 중단되게 됐다. 미국은 가장 큰 러시아 아이 입양국이었음. 당장 지난해 말 미국 입양이 결정됐던 러시아 고아 46명이 러시아에 남게 됐음. 러시아에는 양육권자가 없는 고아가 7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미국으로 입양된 러시아 아이는 모두 4만5천여 명에 이룸. 지난해에도 960여명의 러시아 아이가 미국인 양부모를 찾았음. 비판론자들은 러-미 양국의 정치 갈등 와중에 죄 없는 아이들이 희생양이 됐다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음.
- 미국의 '마그니츠키법' 채택에 러시아가 '디마 야코블레프법'으로 맞대응하고 나서면서 양국의 외교 갈등이 한층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바. 중·일 관계

● 일본, 中 견제 육해공 통합방위전략 수립 착수(1/1, 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10~20년 후 중국의 공격 등 유사시 시나리오에 근거한 육군과 공군, 해군의 전력을 일원화하는 '통합방위전략' 수립에 착수한다고 산케이신문이 1일 보도함.
- 이 신문에 의하면 일본 방위성은 중국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침공 등을 위주로 북한과 러시아의 공격을 상정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육상자위대와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의 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통합방위전략의 수립을 올해를 이전 마무리하기로 했음.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이 통합방위전략을 올해부터 개정 작업에 착수할 '방위계획대강'에 반영할 방침임.
- 통합방위전략은 중국과 북한 외에 러시아를 포함한 3개국의 동향을 중심으로 장래 아시아 안보환경을 분석하고 미·일 동맹과 국방력 정비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그에 따른 장비 운용 계획도 마련할 예정임.
- 통합방위전략에 포함될 대(對) 중국 시나리오는 ▲센카쿠 침공 ▲센카쿠와 주변 섬 침공 ▲센카쿠를 비롯한 주변 섬과 대만 침공 등을 상정했음. 이에 대비해 일본은 오키나와 주둔 미군의 주력부대인 '제31 해병원정부대(약 2천200명)' 규모의 해병대 기능을 육상자위대가 갖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또 중국군의 활동이 활발한 동중국해의 상시 감시를 위해 대형 비행선으로 구성된 성층권 플랫폼과 무인정찰기 도입도 검토하기로 함. 중국의 해군력과 공군력 증가를 예의주시하면서 신형 잠수함과 2030년 퇴역하는 항공자위대의 주력전투기 F15의 후계기 개발과 도입도 서두르기로 함.
- 이는 아베 정권이 '중국 위협론'을 근거로 국방력 증가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이어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음. 이미 아베 총리는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에게 지난 2010년 말 각의에서 결정한 방위계획대강과 중기 방위



력 정비계획을 수정하라고 지시함. 자민당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자위대의 전력 강화계획을 포함하겠다는 것임.
 - 방위계획대강은 2011년도부터 10년간의 국방 전략을,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은 5년간의 국방 정비계획을 담았음.

● **中프로펠러기 센카쿠 또 접근…日전투기 긴급발진(1/5, 연합뉴스)**

- 중국 프로펠러기(propeller plane)가 일본과 영토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에 또 다시 출몰하면서 일본 전투기가 긴급 출동하는 상황이 재연됐음.
- 일본 방위상은 5일 오후 12시께 중국 국가해양국 소속의 Y-12프로펠러기가 센카쿠 열도에서 100km쯤 떨어진 영공에 나타나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켰다고 밝힘. 방위상은 자위대 전투기가 나타나자 중국 항공기가 방향을 바꿔 떠났고 일본 영공을 침범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 중국 항공기가 센카쿠 열도 인근에 나타난 것은 지난해 12월 26일 이후 처음임. 중국은 지난해 12월13일 해양감시용 프로펠러기를 센카쿠 영공에 보낸 이후 22일과 26일 등 수차례 항공기와 감시선을 센카쿠 열도 인근으로 보내 일본과 신경전을 벌였음.

사. 일 · 러 관계

● **2월 발효되는 일러 비자 협정, 푸틴 대통령이 서명(12/31, 산케이신문)**

-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31일, 일·러 간에 사증(비자) 발행 수속을 간소화하는 협정의 비준 법안에 서명했음. 일본 측은 이미 국내 수속을 끝내고 2013년 2월에 발효할 예정임.
- 비자협정에 따라, 문화·스포츠 활동을 위해 단기로 러시아에 입국할시 현재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초대장"의 취득이 불필요해지게 됨. 기업 관계자등은 3년 이내의 비자의 취득이 가능하게 되어, 인적 교류 확대가 기대되고 있음. 일러 양국은 12년 1월에 라브로프 외상이 방일했을 때, 이 협정에 합의했음.

아. 기 타

● **법원, 야스쿠니방화범 日인도 거절..외교파장 주목(1/3, 연합뉴스)**

- 외교·과거사 문제, 국민정서 등이 복잡하게 얽혀 관심을 모았던 야스쿠니(靖國) 방화범 류창(38)의 신병인도 문제가 본인 및 중국의 희망대로 '중국행'으로 결론이 났음. 법원은 3일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진 중국인 류창에 대한 일본의 인도요구를 거절하는 결정을 내렸음. 이에 따라 류창은 금명간 중국으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짐. 그동안 중국뿐 아니라 일본도 류창의 자국 인도를 강하게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에 따른 일본의 반발이 예상됨.
- 서울고법 형사20부(황한식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적 범죄를 저지



른 류창을 일본으로 인도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 질서와 헌법 이념뿐만 아니라 대다수 문명국가의 보편적 가치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일본 불(不)인도 결정을 내렸음.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범행의 대상인 야스쿠니 신사가 법률상 종교단체 재산이기는 하지만 일본의 대외 침략전쟁을 주도한 전범들이 합사돼 있는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곳으로 평가된다"면서 "류창의 범행은 정치적인 대의를 위해 행해진 것으로 범행과 정치적 목적 사이의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힘.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의 기준으로 범행의 동기, 목적, 대상의 상징성, 범행과 정치적 목적의 유기적 관련성, 법적·사실적 성격, 잔학성 등 6가지를 제시했음. 한국 법원이 정치적 범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은 처음임.

- 이번 결정에 따라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류창은 즉시 석방됨. 자신의 외할머니가 한국인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밝힌 류창은 2011년 12월 일본 야스쿠니(靖國)신사에, 지난해 1월에는 주한 일본대사관에 각각 화염병을 던짐. 그는 주한일본대사관 화염병 투척 사건으로 서울에서 체포된 뒤 처벌(징역 10월)을 받았음. 징역형은 지난 11월 끝났으나 일본이 자국 내 범죄를 이유로 신병인도를 요구해 옴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았음.
- 정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힘. 법무부는 "정부는 범죄인 인도 요건에 대해 사법부와 일부 견해를 달리했으나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 류창을 오늘 석방할 예정"이라고 밝힘.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관계국도 법치주의 원칙과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함.
- 중국과 일본 정부는 법원 결정에 대해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음. 그러나 양국 언론은 법원 결정을 속보로 보도했고 네티즌들도 큰 관심을 보였음. 정부 안팎에서는 법원의 이번 결정이 한일관계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그러나 정부로부터 독립된 사법부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직접적으로 이번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임.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한국에 대한 일본 내 여론이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있음. 특히 법원의 결정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특사단 방한 바로 전날 이뤄졌다는 점에서 4일 일본 특사단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도 주목되고 있음.
-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당장 항의한다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본의 직접적인 반발은 없을 것 같다"면서도 "정치권 내 우파들의 분위기가 악화하면서 이들이 독도나 교과서 문제 등에서 한국이 한대로 깊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함.
- 일본과 달리 그동안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류창의 송환을 요구해온 중국은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할 것으로 전망됨. 중국 정부는 군국주의를 심판한다는 명분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불을 지른 류씨의 신병이 일본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왔음. 중국 누리꾼들은



류씨를 '영웅'으로 치켜세우며 한국 법원의 결정을 일제히 환영했음. 한 누리꾼은 쿠키닷컴 게시판에서 "한국이 지혜로운 결정을 내렸다"며 "영웅의 귀환을 환영한다"고 말함.

● 중국군, 미얀마 전투기 월경 부인(1/6, 연합뉴스)

- 중국군이 미얀마 전투기가 반군과 교전 중 중국 국경을 넘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함. 6일 환구시보(環球時報)에 따르면 중국 공군 관계자는 미얀마 전투기가 중국 국경에 5km까지 접근한 적은 있지만 월경한 적은 없었다고 밝힘.
- 환구시보는 지난 4일자에서 미얀마와 국경을 맞댄 잉장(盈江)현 주민들의 말을 인용, 지난달 28일과 이달 1일 각각 2대의 미얀마 전투기가 국경을 넘어 중국 영공에서 비행했다고 보도한 바 있음. 중국 정부는 최근 미얀마군 포탄이 중국 국경을 넘어온 것과 관련해 미얀마 정부에 항의했음.
- 지난달 30일 밤 미얀마군 포탄 3발이 윈난성 잉장(盈江)현의 한 민가에 떨어졌지만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음. 미얀마 카친주에선 2011년부터 정부군과 소수 민족 반군인 카친독립군(KIA) 간 교전이 격화됐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